

第225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6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노동부소관
- 2.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가. 노동부소관

審査된案件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노동부소관 1
- 2.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가. 노동부소관 1

(10시18분 개의)

○委員長 李允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노동부소관
- 2.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가. 노동부소관

○委員長 李允洙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소관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보고를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노동부장관이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允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5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2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온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제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실업률이 3%대까지 낮아지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시다라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시대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2년은 성장의 고삐를 움켜쥐고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무한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느냐를 결정 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노동부 전 직원은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실업이 하락추세에 있었습시다라는 지난번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내년도에는 실업률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노동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실업대책을 내실

있게 점검하고 얼마 전에 확보한 추경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서 청소년 및 장기실업자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창의적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교과과정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새로운 과정에 맞추어 훈련장비를 대폭 교체하고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등 훈련의 내실이 다져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되 연장분을 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문제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140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5721억 원, 재정융자특별회계가 170억 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20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229억 원으로 2001년도 예산 7215억 원보다 14.9%인 107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부가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8조 1503억 원으로서 2001년 7조 2390억 원에 비해서 91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보면 고용보험기금이 2조 7699억 원, 산재보험기금이 2조 2668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이 2조 989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2523억 원, 산재예방기금이 289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이 4734억 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개요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允洙** 양해해 드릴 테니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2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실장, 중요한 부분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총괄, 사업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먼저 내년도 노동행정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정치 일정과 월드컵대회 개최,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 문제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이 노동행정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요과제로서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되도록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1세기 IT시대에 부응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점 투자분야를 말씀드리면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안정망 운영 내실화를 통한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자 특성에 맞는 성취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첨단 지식기반 직종의 훈련 인프라를 보강하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IT관련 분야의 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근로자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의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정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2억 3100만 원으로서 금년도 47억 5500만 원보다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47억 5500

만 원보다 10.2%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소관 부처별로 분리계상 방침에 따라서 9억 9100만 원을 우리 부 소관에 신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6139억 8500만 원으로서 금년도 7214억 9200만 원보다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721억 원, 재특이 170억 원, 농특이 20억 원, 에특이 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721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협력사업이 303억 원으로서 9.2%가 증가되었고 고용안정사업은 1561억 원으로서 36.4%가 감소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076억 원으로서 7.6%가 감소되었습니다. 근로복지사업은 307억 원으로 14.8%가 감소되었고 근로여성사업은 210억 원으로서 40.3%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재예방사업은 85억 원으로서 6.9%가 증가되었고 기관운영은 1176억 원으로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재특회계는 금년과 동일수준으로 170억 원, 농특회계는 20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에특회계는 228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5721억 중에서 인건비는 92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3.4%가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는 4799억으로 금년도보다 19.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용자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사협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지원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실장, 그렇게 깡그리 다 읽어 가면 오늘 하루종일 이것 하다가 말아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지금부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동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21억 원, 노사정위원회 운영에 26억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창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책정했고,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위한 ILO공동연구사업 지원에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노동정책 홍보를 위한 노동뉴스 발간·배포에 8억 46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노사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위원회 운영 지원에 7억 9100만 원,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임차보증금 인상과 사무실 OA 설치에 1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노동교육원 출연입니다.

노동교육원을 21세기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중추적 노사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지원사업은 노사관계 전문교육 확대를 위해서 22억 원, 노사협력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강의를 증축과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서 1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외교활동 강화입니다.

노동외교활동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지원사업은 국제기구 회의참가 지원에 4억 5000만 원, 해외진출기업·국내 외투기업의 노사안정 지원을 위해서 1300만 원, 국제노동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ILO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 ILO·OECD 파견부담금에 2억 9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총 실업대책비는 2조 584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각 부처별로 내년도 실업대책예산을 분석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 노동부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 실업극복국민운동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 고용보험 업무위탁 인건비 지원에 22억 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공공근로를 통한 단기일 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인턴제를 50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구직세일즈 3200명에 대해서 56억 43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취업촉진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직자의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정보 제공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취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4억 원입니다.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를 위해서 36억 원, 노동시장 정보전달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3억 7000만 원, 고용전망 운영지원을 위해서 9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망 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고용안정센터와 일일취업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구인·구직자에 대한 밀착상담과 심층 직업지도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용안정센터 136개소 운영지원을 위해서 13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취업센터 16개소 운영지원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 직업상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32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과 자활지원서비스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자활구직세일즈를 8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대상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20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비진학청소년 등 영세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240억 원을 책정하고, 신규졸업 청소년 등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직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5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첨단유망직종의 취업유망분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3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서 기능대학 신·개축에 87억 원인데 그 내용은 정수기능대 실습동 개축에 7억 5000만 원, 항공기능대학 실습시설·장비확충에 63억 5000만 원, 광주기능대 도서관 신축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훈련기관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257억을 계상하였고 신산업분야 학과증설에 4억 5000만 원, 노후시설과 장비보강을 위해서 86억 7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립을 위해서 25억 6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카드제도 실시확대를 위해서 5억 6000만 원, 직업훈련기관 2000개소에 대한 과정평가를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신산업 자격제도 운영으로 우수기능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개발과 자격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22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천안에 국가기술자격 상설검정장 건립을 위해서 2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20페이지 근로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임금채권 보장과 산재보험제도 운영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금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위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60억 원을 계상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2억 6000만 원, 산재보험기금 운영에 57억 원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생활편의 증대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확충을 기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및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5개소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5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57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에 290억 원을 전출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93억 원, 근로자 신용보증 변제금 지원에 26억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에 170억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여성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통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해 나가고자 1억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직

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상담·홍보 강화를 위해서 6억 4000만 원을 배정했고, 모성보호 비용의 국고지원을 위해서 1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을 위해서 3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산재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지원을 위해서 43억 원을 책정했고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한국노총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서 5억 4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26페이지 진폐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위해서 20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21억 원을 지원하고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27페이지는 주요신규사업과 완료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이하의 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委員長 李允洙 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18페이지 상단에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3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고용촉진센터하고 기능검정센터를 한꺼번에 포괄해서 종합적인 인력개발센터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처음 하는데 부산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부산지역……

○委員長 李允洙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朴赫圭 委員 성남에다 해야지요.

○委員長 李允洙 야당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성남지

역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龍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62억 3100만 원으로 매년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를 좁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 97년 이후 반환 결정된 인천, 성남 등 근로자복지매장 체납금 11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9억 9100만 원은 그동안 징수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이 체납된 것으로 내년도에 새로이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확보된 채권의 우선순위가 국세 등에 비해 후순위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야 할 정부가 세입예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계상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실업자 대부사업 이자율의 현실성 문제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실업대책 계정에서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연리 7.5%와 전직실업자 등에게 가계안정자금으로 연리 8.5%로 대부해 주는 사업이며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실업자대부사업은 시중금리와 별로 차이가 없고 보증인 설정요구 등으로 신청자 중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일반은행에서의 대출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대부금리의 인하를 검토하고 이들 대부금리 인하를 위한 이차손보전 지원예산을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의 기금사업 편성 문제입니다.

2002년도 노동부 소관 세출예산 6139억 8500만

원은 2001년도에 비해 14.9%인 1075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이는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자활훈련사업 등 과다계상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노동부 소관 6개 기금의 총 지출운용계획은 8조 1503억 원으로 노동정책의 많은 부분이 주로 기금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증액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의 여부는 의문시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져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출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금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편성당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리적인 편성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사업 중 먼저 노사협력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문제입니다.

노사협력지원사업비는 한국노총과 노사문제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은 동 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그 소요내역이 당해 노동단체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고정비용인 인건비 등 운영비가 대부분으로 민주노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노동단체에 대한 재정자립도 제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추진사업의 내실화 문제입니다.

신노사문화창출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01년도 13억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8000만 원이며 신노사문화사업이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노사문화사업비 중 연구개발비는 노동부의 정책연구개발비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중복 편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LO공동연구사업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ILO공동연구사업의 예산 2억 원은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비판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노조, 공무원노조 허용 등 ILO에서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ILO와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노동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내 노동문제에 대해 ILO를 설득시키려는 홍보사업 위주로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동연구사업이 국제노동단체가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예산의 특정업무비, 국외여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 출연금의 적정규모 확보문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용안정사업 중 자활지원사업 예산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2002년도 자활사업예산은 전년보다 60%에 해당하는 585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의 실업실적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활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예산 112억 2000만 원은 2001년도 자활인턴제사업 대신 편성된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전환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동 사업도 일반 실직자와는 달리 자활대상자는 근로의욕이 높지 않고 사업주의 입장에서조차 채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공공근로에서 발생한 비생산성과 소모성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사업의 효과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활직업훈련비 예산이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358억 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편성된 2002년도 예산도 2001년도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부 소관 자활사업 대상자 확보문제,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와 사업의 참여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자활구직세일즈 사업대상 8000명과 자활직업훈련 대상 1만 5000명 등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된 자활사업 예산도 2001년 9월 말 현재의 실적이 6760명 임을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

업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안정망 운영 내실화 문제입니다.

2002년도 고용안정망 운영과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은 462억 9700만 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78억 37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동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것처럼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이 실적 우선주의로 운영됨으로써 취업자를 부풀리는 등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는바 제도개선 관련 예산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직업상담원은 민간계약제 신분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직업상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예산은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출금 적정성 문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출연하고 있는 10억 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건비의 15%에 해당되며 타 기관의 인건비 지원이 기본급의 30%인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으로 보입니다.

2000년7월1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구체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용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사업수행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실시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One-Stop 지원 및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권한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인턴제사업의 효과성 문제입니다.

청소년인턴제 예산은 2001년도에 비해 210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

졸 미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인턴제 예산의 감액편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의 인턴비 지원에 의한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실업대책을 위해 훈련비와 인턴지원에 따른 인턴제 확대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 예산액 240억 8500만 원은 2001년도에 비해 78억 89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은 일반 실업자직업훈련과 거의 차이가 없고 2000년도에도 중도탈락률이 32%에 이르는 등 사업비의 미집행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계속 반환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2002년도에 72억 7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실업률 감소추이 등을 고려한다면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도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축소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립예산 문제입니다.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립예산은 2002년에 114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인력개발타운에 설치되는 인력개발센터, 고용촉진센터, 자격검정센터는 기존 부산지역의 각 시설 즉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지방노동관서, 상설검정장 등과 일정부분 중복됨으로써 사업의 중복우려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입니다.

현재 연간 115만 원인 등록금을 2002년에는 15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자체 수입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기능대학이 일반 전문대학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실기위주의 교육과정과 취업률 외에 국공립 전문대학에 비해 저렴한 등록금 등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입학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타 전문대학과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자체수입의 증대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사업 중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 문제입니다.

중앙근로복지센터 건립지원비는 현 한국노총 부지에 8399평 규모의 중앙근로복지센터 건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01년에는 설계비로 1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9월 말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근로복지센터 건립지원비는 한국노총의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립예정인 중앙근로복지센터가 자체수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수입·지출부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건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노동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재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금 삭감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산재보험사업과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2001년에는 양 사업 담당인력 인건비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2002년도에는 인건비 중 기본급의 30%로 축소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와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계속 인건비를 축소 반영한 것은 법 규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예산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예산배정의 측면도 있겠으나 향후에는 법 규정에 부합한 사무집행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여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근로여성사업은 2001년보다 40.3% 감액되었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비 등 남녀고용평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모성보호관련법이 2001년11월1일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홍보비,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비 등이 증액되거나 새로이 예산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모성보호비용 지원비의 추가반영 필요성입니다.

모성보호비용 지원비는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으로 산전후보호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늘어난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

가 재정 및 사회보험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모성보호비용 중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국가가 부담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며 일반회계에 반영된 150억 원은 고용보험기금에 책정된 산전후휴가급여비 총액의 12% 정도에 불과한 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해 산전후휴가비용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을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산재예방기금의 목적 외 사업예산의 문제점입니다.

2002년도 산재예방기금의 지출예산 가운데 산업안전활성화를 위한 예산 22억 3100만 원은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이는 노동부의 공무원이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재예방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규모 문제입니다.

2002년도 산재예방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2001년도보다 5.8%가 증액된 69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지출예산의 100분의 3 이내 근접하는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을 산재예방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정부가 산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산재예방기금 출연금 중 근로자단체 산재예방활동비로 5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한국노총의 안전문화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출연금과 기금예산 등 총 6억 5700만 원입니다.

다만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동기금에 출연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지원비는 당초 기획예산처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6억 5700만 원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나 심의과정에서 5억 4800만 원으로 조정되고 나머지

1억 900만 원은 기금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을 일반회계사업의 보조적 성격으로 사용하여 기금예산과 일반회계예산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允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하기 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려야 할 텐데 늦었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저희 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장관 이하 노동부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李承哲 위원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李承哲 위원을 소개합니다.

○**李承哲 委員** 李承哲 위원입니다.

늦게 된 만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允洙** 다음은 대체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새천년민주당의 李相洙 위원과 韓明淑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기 때문에 새천년민주당에서 추천해 오신 朴洋洙 위원과 崔明憲 위원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朴洋洙 위원과 崔明憲 위원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도 어제와 같이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洋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洋洙 委員** 민주당 소속 朴洋洙 위원입니다.

우선 15분 동안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째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서 직업재활기금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도 자활직업훈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만일 시간이 모자라면 국제노동재단 기금확보방안과 관련한 질의와 산업재해예방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규모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

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게재되도록 선처를 바라고 노동부에 계신 분들은 서면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3519억 원보다도 28.2% 감액된 2523억 원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공단출연금 738억 원, 장애인고용장려금 543억 원, 융자금 403억 원 등에 지출하는 것처럼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9월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고용부담금의 감소추세에 대한 부분과 고용보조금의 과다지출부분, 장애인범위 확대, 2000년도 법 개정 에 따른 보건복지부 재활사업에 대한 추가기금 소요 등으로 기금잠식이 필연적으로 올 것 아니냐…… 내가 보기에 2003년도에는 기금의 고갈상태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관님께서 “국가 일반회계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책 무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출연금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높여볼 생각이 다.” 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장관님 그때를 상기 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勞動部長官 劉容泰** 향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일반회계 운용예산으로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오랜 숙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동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기금사업이나 기타 일반회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도 매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朴洋洙 委員** 2001년도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 무인원이 5452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4065명으로 민간부문 부담분에 준해 보면 약 45억인가를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맞습니다.

○**朴洋洙 委員** 둘째는 지금 10월30일 입법예고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의무고용 대상사업장을 현재 300인에서 2003년에는 200인, 2005년에는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수입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면 그 취지가 그럴 듯한데 민간부문과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민간부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씌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장관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려면 역시 의무를 부과하는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문제는 쓰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실업자의 고용문제와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차별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고용숫자가 적다는 지적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적용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금도 늘리고 그 늘린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고용촉진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洋洙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44억 54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3.4%로 62억 749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수행 및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직업재활사업이 기금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본 위원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劉容泰** 이 기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목적 내에서, 범위 내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과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은 한 번 시장을 개척하고 구직을 알선해 주는데 일 반고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올 것을 장애인의 경우에는 열 번을 갔다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소요하게 되는 등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비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洋洙 委員** 제가 국감 때 분당에 있는 센터를 가보았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활

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장애인입니다. 그 아들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역지사지라고 본인이 겪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자유스럽고 격의없고 차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정상인들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질의한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알아 주시고 특별한 지원과 각별하고 세심한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자활직업훈련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 말 현재 자활직업훈련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당초 예산이 558억 원이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朴洋洙 委員** 그런데 19억 5400만 원을 집행했고 그 내역을 보니까 훈련인원 계획은 3만 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3374명, 11.2%밖에 못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80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전용을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금년도 자활사업은 노동부가 통계를 잡은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목표로 잡은 통계수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설정이 잘못되어 과다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집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있었고 전용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밖에 재원이 없어서 여기에서 80억 원이 전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洋洙 委員** 여당의원이기도 한 장관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증액은 못해 줄 망정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전용한다든지 하면 다음 노동부 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신뢰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심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노동재단기금확보 관련부분은 국제노동재단의 부족한 운영비를 대책없이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재원확보차원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국제노동재단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國際協力官 孔德壽** 국제협력관 孔德壽입니다.

국제노동재단의 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해서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합니다.

국제노동재단은 97년12월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정부에서는 97년, 98년도에 각각 20억 원씩 해서 40억 원을 지원했고 재계에서 당초 40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3억 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자에 의해서 운용하려고 했었는데 기금출연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억 원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朴洋洙 委員** 37억 원인가 구성되어 있지요?

○**勞動部國際協力官 孔德壽** 원래는 43억 원인데 그 중에 실질적인 운영비는 그것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임차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유사한 기관으로 일본에 국제노동재단이 JILAF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97%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朴洋洙 委員** 고맙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산재예방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규모 확대방안을 검토해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晟祚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委員** 金晟祚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중의 각종 언론이나 신문 등에 보면 청소년 실업문제 특히 대졸실업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생기고 난 이래 최근 이삼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노동조건은 더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02년 예산을 편성할 때 비록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제로베이스의 예산을 짜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어떤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통계에 의해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던 점을 시인한 것을 생각하면 그런 점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실업률을 어떻게 예측하고 이 예산을 짤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장관으로서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의를 金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연말에 와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서 금년도 성장률이 2% 내지 3%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경제여건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장률은 노동부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KDI, 한국개발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3%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로서도 3.7%에서 3.8% 정도 되지 않을까……

○**金晟祚 委員** 실업률이 3.7% 내지 3.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말씀이지요?

(李允洙 위원장, 申溪輪 간사와 사회교대)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왜냐하면 실업률이 9월 현재 3%로 나와 있거든요.

○**金晟祚 委員**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현재 실업률이 3%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률 산출방법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또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자로부터 벗어나기를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실업률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포기한 실업자, 이러한 실업자를 실업자로 통계조차 잡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그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저희들은 통계청의 통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체의 행정력이나 조직 가지고는 그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金晟祚 委員** 앞으로는 인구센서스나 이런 것을 할 때 취업을 포기한 실업자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바깥으로 발표는 안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만 정확한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고 지금 공표하는 수치 말고 보조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수치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면 그런 수치를 참고해 볼 때 취업마저도 포기한 실업자의 숫자는 몇 % 정도 됩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지금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만 정확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노사분규의 증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것도 사실 예년의 성향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金晟祚 委員** 장관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저희들 희망은 그렇습니다.

○**金晟祚 委員** 희망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자기의 주장이나 권익보다는 일단 회사의 발전을 고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金晟祚 委員**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을 보면 일반세출에서 전체사업비가 14.9%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金晟祚 委員** 그 중에서 인건비 9.2%, 기관운영비 15%, 노사협력사업비 9.2%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

는 그리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비는 36.4% 감소, 근로복지사업비는 4.8% 감소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것까지 고려할 정도의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도 낮추어야 되고 취업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올리고 기관운영비 올리고 노사협력사업비 9.2%나 올리고 사업비는 36.4%나 이렇게 많이 감소시킨 예산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고 예산안이 국회에 접수된 후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노사협력사업비가 9.2% 증가한 주요원인은 노동위원회 임차보증금이 1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에 청사가 굉장히 노후된 곳이 있는데 그것을……

○**金晟祚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 위원들 사무실 옮기는 것이 그렇게 급해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2%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교육원의 증축예산이 10억 원 증액되어서 노사협력사업비가 9.2%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그러니까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복지를 위해서 사무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임차하는 데, 이런 곳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9.2% 증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청사 자체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예산은 금년 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예측된 실업률 3%대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金晟祚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상황을 약간 여유롭게 생각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중노위나 지노위 사무실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꿈으로 인해 업무의 능률도 올려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예측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더 심각하니까 노사협력사업비나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을 대폭 줄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성 예산으로 바뀌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거기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노동위원회 청사라든지 교육원 증축은 다 이유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증액해 주고 다만 실업상황이 9월 말 현재 3%입니다마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업변동 추이에 따라서 실업대책예산은 별도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晟祚 委員** 작년에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말이 되면 실업률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렇다면 그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동절기 실업대책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동절기 실업대책은 금년 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을 최대한 염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서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작성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사업, 근로복지사업 이런 것은 약간 줄이고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으니 당연히 바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위원님, 우리가 실업대책예산을 줄여서 청사를 잘 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사는 청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것이고……

○**金晟祚 委員** 당연히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어느 것을 국민이 더 원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그래서 내년도 실업대책사업은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가지고 가급적 최대한 단시일 내에 집행하고 그래도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金晟祚 委員** 제가 실장님이라도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건비, 기관운영비, 노사협력사업비 등은 줄이고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장관, 실업대책사업비 예산 중에 20억 원인가 올랐지요?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단은 당초 기획예산처에 19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업대책비는 실직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총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억 원을 요구했는데 20억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장관님, 1조 5235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193억 원이나 20억 원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당 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확보해서 돈을 빌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확보한 예산이 1조 5235억 원인데 193억 원, 20억 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

○**金晟祚 委員** 장관님, 그것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확보해 놓고 사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해 주는 이율이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서 빌려갈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일괄 다 준비했는데 실제로 운용하지 못해서 이자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자분 차이나는 것을 정부예산에서 받아서 보전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그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하고 실직했다가 창업한 사람이 은행에 물어야 될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노동부 예산 혹은 근로복지공단 예산으로 메워 준다면 굉장히 적은 돈을 준비해 놓고도 효율적으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사실 대부이자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것 외에도 창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임의로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기금은 정부자금으로 확보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빌려 주는 재정금융의 이용방법은 없습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책정했던 이자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기금 운용하는 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이자 차이는 왜 이 돈을 빌려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제가 제안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일선 시군이나 광역 시도 등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시나 도에서 은행에서 직접 빌려주게 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훨씬 적은 돈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원금까지 다 빌려준다는 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다 확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이 돈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지방행정 부분하고 기금운용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기금운용 쪽에서는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金晟祚 委員** 좋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금운용 자체를 포기하고 차라리 노동부 예산에 실직자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이자보전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잡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것이 예산당국에 반영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합리적인……

○**勞動部長官 劉容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목표수정 내지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가급적이면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다음은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朴仁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시다가 장관자리에 앉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시간도 일천하고 해서 어려운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朴仁相 委員** 위원장하시면서 호통치고 할 적에는 상당히 잘 나갔는데 지금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金晟祚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업자의 전망 또 예산의 불균형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조화를 시켜가지고…… 사실 金文洙 위원도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업통계에 대해서는 국감 때마다 나왔거든요. 이제는 장관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근로여성정책 관련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근로여성사업 예산은 21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352억 2000만 원 대비해서 40.3%가 삭감되었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맞습니다.

○**朴仁相 委員** 일하는여성의집 운영비가 여성부로 이관되고 근로청소년 연극관람 지원비가 문화관광부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이 노동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왔다는 것은 저도 다소 이해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예.

○**朴仁相 委員**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비 등 남녀고용평등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증액되지 못한 것은 개정된 모성보호법이 2001년11월1일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그래서 저희들도 고용상 성차별 개선 관련예산으로 당초 12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朴仁相 委員** 그래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직장내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주요 내용으로는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직장 내 성희롱 해소를 위한 구제절차를 더욱 확충하고 민간단체 고용평

등상담실 설치·운영지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신설, 고용평등우수기업 발굴·지원 등 실질적 남녀고용평등 실현방안이 정책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때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고용평등 정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감독관이라든지 고용평등위원회 등 운영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예산 1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따라서 본 위원은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절대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 부분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금년 예산의 특색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짠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仁相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개정 시행된 모성보호 관련정책이 현실에서 사실상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예산이라든지 인력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사실상 11월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어떤 문제가 돌발할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 개 법률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들어가는 큰 법률인 모성보호법률 시행이 이제 시작되었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예.

○**朴仁相 委員** 법이 시행되어 진행되어야 할 과정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작년 예산에서 40.3%가 삭감되어도 우선 짜여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그래서 저희들 소망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

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아마 위원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것 없을 것이예요. 불요불급한 노동부 예산을 깎아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깎는 것은 싫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이……

○**朴仁相 委員** 증액시켜 달라는 것만 하고 깎는 것은 깎지 말아 달라,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예.

○**朴仁相 委員**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홍보비라든지 남녀고용평등위원회 운영비라든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라든지 전체가 증액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비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너무 심하게 해 놓았고 제가 볼 적에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든 환노위에서 다루든 간에 이 기회에 이 문제는 증액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입장 어때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朴仁相 委員** 증액한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감하지 깎아야 된다면 동감 안 하지요? 알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신용보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14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저소득근로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신용보증을 지원받아 보증부담 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관님, 노동부가 애초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위해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朴仁相 委員** 담당자, 나오세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근로기준국장 白日天입니다.

○**朴仁相 委員** 처음에 111억 4900만 원 요구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치된 것이

26억 6300만 원이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이렇게 깎이 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의 기본취지가 정상적으로 집행될지 안 될지 의문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확실하고 자신있게 판단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왜 111억 4900만 원을 요구했어? 26억 원으로 되어도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111억 4900만 원을 요구 안 해야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그러나 이것이 초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朴仁相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노동부가 애당초 아주 추상적으로는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억 원이 되어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왜 111억 원을 요구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0년도 대부사업을 보면 약 70.2% 정도의 대부율을 보이고 있고 2000년 대부예정자의 29.4%가 보증요건 미충족으로 대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법률에 의해서 보증이 필요 없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렇다면 숫자는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9.4%가 보증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를 못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정하면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한 가지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억 원 부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에서 그 사업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朴仁相 委員** 그러면 애당초에 인건비를 얼마 요구했어?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서로 묻고 그렇게 답변하기 시작하면 저도 갑갑하고 시간 가니까, 들어가십시오.

장관님께서서는 적극적인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劉容泰** 방금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 직제가 반영되도록 되어 인건비가 계상되어 예산규모가 커졌는데 그 직제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액 빠진 것 때문 같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대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답변 중에 인건비가 빠져 버리니까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111억 4900만 원 중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길래, 26억 원으로 해도 충분히 자신 있다면 나머지는 인건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勞動部長官 劉容泰** 아닙니다. 직제를 반영하도록 되었는데 직제 자체가 안 되니까 운영비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신용대부에서 모처럼 법률의 혜택을 받을 때 추호도 누락됨 없이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등록금 인상 및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능대학 등록금 인상과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2002년도 자체수입을 보면 196억 2300만 원으로서 2001년 대비 25.7%에 해당하는 40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朴仁相 委員** 2002년도 현재 연간 115만 원이던 등록금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인데 그동안 취업률 등에서 타 대학과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98년 이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 오면서도 지원율이 낮아지지 않아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자립도

를 제고하여 지원예산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맞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朴仁相 委員** 본 위원은 그동안 기능대학이 일반 전문대학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실기위주의 교육과정과 취업률 등만이 아니라 국공립전문대학에 비해 저렴한 등록금 등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동의합니다.

○**朴仁相 委員** 올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대상자인 고교졸업자가 향후 2003년까지 매년 감소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대학이 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서 입학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취업률이 조금 좋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춰 등록금만 계속 올리는데 입학률이 아주 낮아졌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일반대학도 문제가 되는데 기능대학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기능대학의 입학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로서는 모자라는 재정을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채워나갈 방법이 없어서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입학 시기에 가서 등록금을 약간 인상시켰음에도 현재와 같은 진학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원에 미달해서 문제가 생길 것인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현재 판단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했는데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내년 1년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저희들 판단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朴仁相 委員** 제가 보기에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고 실기위주로 교육시켜 주고 취업이 잘 되니까 거기에 매력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등록금은 등록금대

로 올리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된다면 학생들은 줄어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勞動部長官 劉容泰** 현재 판단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판단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감에서 제가 강조했던 기능대학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9월30일 현재 퇴직금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관님 모르시지요? 893명 분에 해당하는 581억 원입니다. 현재 적립액은 135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46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朴仁相 委員** 노동부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산선고가 나도 3개월분은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노동부 산하단체에서 제일 선결조건으로 정리해야 될 퇴직금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는 것을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동안 노동부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서도 예산당국과 협의했던 일이고 재작년에도 예산당국과 협의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기금을 확보하는 데 기능대학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부동산 이런 부분도 일부 매각해서라도 퇴직금 확보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어찌 보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산하에서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되어 몇 년을 끌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 간에 협조가 안 되면 국무회의에서 거론되더라도 적어도 정부 산하단체에서 퇴직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모범적으로 정리해야지, 기업이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입건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다만 이 경우는 신분의 변동 없이 현재 취업을 그대로 하고 있고……

○**朴仁相 委員** 이유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변동이야 있건 없건 상관 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사유가 발생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옳은 말씀입니다.

○**朴仁相 委員** 앞으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알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朴仁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在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 委員** 장관님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관련법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적용확대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全在姬 委員** 그리고 국회의 촉구결의안은 행정부 예산반영에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全在姬 委員** 저는 2002년도 노동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계속 축소하고 있고 또 국회가 결의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모성보호비용의 경우는 정부가 처음 편성했을 때 법 시행을 전제로 일반회계 50%, 고용보험기금 50%로 해서 2001년도에 각각 150억씩 300억 원을 반영해 놓았다가 법이 통과되니까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모성보호비용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거의 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미미하게 하는 것은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성보호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50%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2001년도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여성계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나 하면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도 앞으로 모성보호에 관한 것은 전 여성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반회계 지원이 없으면 전 여성으로의 확대는 그림의 떡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보험기금이 반드시 튼튼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은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암담하게 느끼는 것은 비록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반회계를 증액하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회계에서 50% 부담하도록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노동부장관이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제기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되든 안 되든 우선 장관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에 관해 질의합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全 위원님의 고용보험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은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하여 염려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할 때 아마 여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책위로부터 들은 답변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全在姬 委員** 저도 일반회계에서 50% 지원하도록 증액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일단 증액을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일차적인 노력하시고 그것이 불연이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전 여성에게 확대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또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장관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全在姬 委員** 두 번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적립금이 99년도에 2590억 9900만 원, 2000년도에 2299억 7500만 원, 2001년도에 1229억 5600만 원으로 급감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적립금 감소가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엄청난 장애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정부출연금에 2002년도에 10억 원

이지요?

저는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부담금만큼이라도 일반회계로 출연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45억 4400만 원이어서 저는 적어도 35억 4400만 원은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勞働部長官 劉容泰**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全在姬 委員** 정부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다면 존경하는 朴仁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슬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劉容泰** 당장 법 개정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다른 사업비 형태로 지원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일반회계 부담을 지금보다 늘려 나가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할 때 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나 검토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하여 무엇이 과연 가능하고 올바른 제도의 운영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지금까지 노동부가 일반회계 확보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법 개정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능력이 탁월하신 장관께서 오셔서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적어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만큼의 일반회계 증액 문제는 의결되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것도 적다고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2002년도에는 더 줄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총 인건비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산재보험기금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정규직 기본급의 30%, 고용보험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본급의 30%만 반영하여 2001년도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전체인건비에서 일반회계가 21.6% 차지하던 것이 2002년도에는 9.2%, 산재보험기금은 2001년도에 16.1%이던 것이 2002년도에 10.1%,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01년도에 16.5%이던 것이 2002년도에 10.8%입니다.

노동부가 일반회계 확보 노력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부가 힘이 없어서 자꾸 쪼그라드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니까?

제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딱 들여다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갑갑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관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勞働部長官 劉容泰**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부의 예산규모가 근 3년 동안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천문학적 숫자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회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 비율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결과였기 때문에 노동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업대책을 위한 예산확보가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동부도 소홀했던 것 같고 또 일반회계를 장악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도 그동안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인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도 예결위원회 또는 차년도 예산, 차차년도 예산에는 점점 일반회계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全在姬 委員** 각종 기금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의하지 말고 적어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면 국가가 수용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노동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관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노동문화협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문화협회는 노동문화제에서 수상한 근로자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현재 회원수가 402명이고 본부 및 7개

지부와 미술·문학·음악·노동학술·노동복지·연예·출판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는 전혀 이 협회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 단체에서 한·중·일·대만 노동자와 함께 미술교류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충당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할 때 신노사문화도 한걸음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비와 미술교류전 행사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勞働部長官 劉容泰** 지금까지 아마 일반회계 특히 노동부 예산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하도록 죽 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일반회계, 더구나 따기도 힘든데 그것들이 크게 배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서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을, 문제 제기도 안 되었던 것을 새롭게 하자고 하면 아마 기획예산처가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의 편법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현재와 같이 가고 다만 한·중·일 국제행사라든지 기타 사업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은 산특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우선 1차 연도는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차차 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全在姬 委員** 장관님께서 내년도에 국제교류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원하시겠다고 그것은 또 융통성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노동문화제 자체가 노동부가 만든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상자들이 만든 회가 건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장관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01년도의 자활지원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지요? 이렇게 저는 단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인턴제의 경우에는 원래 300억 원 예산 중에 250억 원은 정부지원 인턴사업으로 전용하고 50억만 갖고 집행은 했는데도 9월 말 현재 예산실적으로 11.3%, 계획인원의 26.5%, 당초 예산으로 볼 때는 예산집행실적 1.8%, 계획인원 5.3%입니다.

부진사유는 장관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상자 확보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미흡과 참여자의 낮은 자활욕구 등에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활구직 세일즈사업이 내년도에 과다 책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2000명씩 해서 8000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9월 말 현재 자활인턴제가 533명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내년에 8000명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견해만 밝히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사업의 중복 문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委員長 李允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溪輪 委員**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느냐? 일반회계를 제대로 증액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돈을 잘못 쓰고 예산을 잘못 세워서 잘못될 것 같다는 예상보다는 꼭 쓸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질의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산업관계라든지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저는 위원들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물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고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도 2001년 예산에서는 0.44%였는데 2002년 예산에서는 0.35%로 줄어들었습니다. 기금도 점검해 보니까 98년부터 2001년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도 했습니다. 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노동부의 주요간부들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각성하고 자각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실 때 과거 몇 년 동안 실업관계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금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노동부 예산의 비중을 보았을 때 노력을 좀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다시 노사관계가 어려워 질 수도 있고 노동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전문위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사업 중에서 노총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꼭 지원해야 할 사항과 항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작년에 20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올해는 요청이 없었나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없습니다.

○**申溪輪 委員**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요청이 있으면 배려를 하실 것인가요?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그렇습니다.

○**申溪輪 委員** 그런 면도 걱정되고 같거나 비슷하게 지원된다면 일면 이해가 되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썩 걸맞지 않

은 면도 있어 보이고 균형도 잃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시정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액수로 보았을 때 형평에서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에 대한 국고보조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쓸 사람이 요청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돈을 쓸 사람이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동안 민주노총에서 사양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지난달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비로소 받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런 형편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을 형평을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申溪輪 委員** 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한다면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뜻으로 질의했는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은 자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신노사문화창출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9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과 사업항목만으로 보면 다소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잘 점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LO공동연구사업에 2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ILO가 현재 우리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사업장 내에 양개 노조를 인정하는 문제 등인데 그것을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ILO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정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충분히 국제기구에 알리는 면에서도 공동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申溪輪 委員** 우리가 ILO에 내는 돈입니까, ILO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申溪輪 委員** ILO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ILO가 한국에 와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실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정부가 아니고 ILO하고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申溪輪 委員 공동연구사업인데 여기에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입각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향후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申溪輪 委員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접대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쓰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공동연구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노동교육원에 출연한 것이 건설비로 11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전체 강의동 증축공사 비용이 29억 4700만 원인데 이것을 2년으로 나누어서 11억 책정하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29억 원 짜리 강의동 짓는데 2년이나 걸릴 필요가 있는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저희도 1년 동안에 사업을 끝내기를 희망하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그동안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당국이 그것을 끝까지 2개년에 걸쳐 하도록 고집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申溪輪 委員 이것은 행정편의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차라리 내년이나 그 후년에 하든지 해야지 29억 원짜리 공사, 간단한 강의동 짓는데 1년간 11억 원어치 짓고 다음해에 십몇억 원어치를 다시 지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申溪輪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이 22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이 실제로 사업성고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실제로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신청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킨 것입니

다.

○申溪輪 委員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프로젝트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프로젝트이고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성과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 이후 전출금이 매년 10억 원씩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려 주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10억 원 이상을 안 주고 고집을 부리니까 저희들로서도 곤란합니다.

아까 全在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45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한번 거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申溪輪 委員 그런 관행을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29억 짜리 공사를 돈이 없으니깐 절반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공사하고 나머지 또 1년 해라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출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주어야 하니까 10억씩 떼어놓고 10억, 10억씩 주는데 이것이 무슨 올바른 계산법이나라는 항변을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全在姬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턴제 문제인데 이것은 한번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애당초 노동부에 신청한 것보다도 감액되어서 50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번 정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것을 실시하지 않아도 잘 되었을 것을 괜히 실시해서 예산 낭비가 더 큰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이 촉진되고 장기고용까지 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인지 평가해 보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후자의 평가가 중요하다면 증액해야 할 것이고 전자의 평가가 중요하다면 줄여야 할 것이라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한 것이 아니고 딱 500억 원을 잘라버린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동부 자료를 보면 연도별 인턴제 운영실적만 보더라도 2001년8월 말까지 선발인원 2만 885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500억 원이 몇 명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2만 8000명 정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勞働部長官 劉容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도 IMF 사태 이후 우리가 정부수립 후에 최초로 경험한 대량실업사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적으로 실업자를 줄이는데 급급했으나 지금은 실업이 3%대인 68만 명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실업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자, 말하자면 양적인 실업대책에서 질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3년 동안 쓴 여러 가지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KDI, 노동연구원 기타 여러 곳에다 그간 실업대책행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 결과를 전반적으로 내년 실행예산을 짤 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申溪輪 委員**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99년에 약 4만 7000명, 2000년에 5만 6000명, 그리고 2001년8월까지 2만 8000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2만 8000명 분에 달하는 710억 원을 요청했는데 210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나름대로 노동부 수요예측에 근거한 숫자인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210억 원을 딱 자른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아까부터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턴제 운영이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실업률을 감안할 때도 실업률에 입각한 숫자가 아닌 것 같고 신규대졸자 취업률 현황에 입각해서 보아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냥 예산편의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자활지원사업에 대

해서는 전문위원도 검토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으므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이 질의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대상을 2만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2년에 2만 3000명으로 추정한 것도 과연 타당한가 하는 걱정이 든다는 말이에요. 200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세웠던 것도 문제투성이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답변도 있었는데 내년에 2만 3000명이라는 추정치는 과학적인 것인지, 이것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勞働部長官 劉容泰** 내년 목표가 지금 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숫자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申溪輪 委員**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만 3000명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만 5000명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勞働部長官 劉容泰** 예.

○**申溪輪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는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타당한 자료에 입각한 것인지……

○**勞働部長官 劉容泰** 금년에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맞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申溪輪 委員** 나중에 숫자가 추정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실시되어서 그전에 잘못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볼게요.

직업능력개발입니다.

농어민이나 비진학 청소년 등 영세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4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도 특히 생계곤란취약계층의 경우에 훈련에 전념할 수가 없어서 중도탈락률이 무척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에 31%, 99년에 37%, 2000년에 32%, 2001년9월 말 현재 25.1%입니다. 또 미집행으로 인한 국고보조 반환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98년에는 120억 원, 99년에 42억 원, 2000년에 51억 원에 이르고 있고 취업률도 20% 내지 30%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런 의미가 반영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첫째 문제는 일반 실업자훈련과 통합하거나 아니면 좀더 분명하게 특화시키고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로 애매하게 놓아두기보다는 아예 특화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알겠습니다.

○**申溪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인데 지자체에 일부 재정 부담을 하라고 하니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이 부분은 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능력개발심의관 朴鎔雄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하면 4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전라남도에서 20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申溪輪 委員**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산을 요구했는데 20억 원 지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申溪輪 委員** 그것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책은 없고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0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전국대회는 반으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종목을 조정해서 여태까지의 전국대회하고는 완전히 규모가 다른 대회가 되겠습니다.

○**申溪輪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책임 있게 일을 하세요.

이번에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신청한 것 같은데 반도 못 내겠다고 하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답답하네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알겠습니다.

○**申溪輪 委員**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申溪輪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

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고 본 위원이 실업특위에서도 지적한 실업자대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실업자대부사업을 보면 장기실직자 자영업 창업지원, 여성실직자장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등 세 가지가 현재 대부 실시 중에 있고 99년까지 지원한 이후 현재는 대부회수사업만 하고 있는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을 합쳐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 금리를 보면 장기실직자와 여성실직자장 창업지원이 7.5%, 가계안정자금이 8.5%, 실업자 힘내라 대부사업이 8.5%에서 9.5%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책자금의 금리가 최저 3%에서 최고 6.75%인 것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있는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금리가 5.75%인 것을 보면 금리 인하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예산조정과정에서 실업대부금리를 6.5%로 낮추기 위해서 이차손보전액 134억 1700만 원을 예산처에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실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농촌경영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의 이차손을 일반회계로 보전해 준바 있는데 유독 실업대부자금의 이차손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정부의 실업극복의지가 결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이차손을 보전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흔히 예산을 가리켜서 정책의 계수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업대부자금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정부의 실업극복의지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동의합니다.

○**金樂冀 委員** 따라서 실업대부자금의 금리는 적어도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인 5.75%보다 낮은 5.55% 정도로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 경우 이차손 소요액은 실직여성자장이 13억 8800만 원, 장기실업자가 11억 9200만 원, 실업자 힘내라 대부가 92억 9300만 원, 가계안정자금 대부가

38억 9300만 원으로 총 157억 66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 부 나름대로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차손을 우리가 대신 메워줄 수 있도록 예산 투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상해 드리면 예결위에 가서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노력하는 것 가지고 안 되지요, 지켜야지요.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쉰在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모성보호비용의 국고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의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은 고작 150억 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지출의 12.2%에 불과한데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의 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초기 단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폭이 반드시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회는 산전후휴가급여 1232억 원의 절반인 616억 원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150억 원 말고도 466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 법은 제정할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선 명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금년 1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약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계하기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내년 1년을 운영해 보고 나서 과연 고용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예산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金樂冀 委員** 466억 원을 증액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현재 추세로 보면 초년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金樂冀 委員** 그다음에 존경하는 申溪輪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노동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명절로 정부에서도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보며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1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였고 사실상 한국노총이 정부를 대신하여 기념행사를 수십 년간 치러왔던 것입니다.

노동부가 당초에 요구했던 1억 2000만 원이 그 행사비로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노동단체가 국고보조를 받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재정을 자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조합의 조직비율을 보더라도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취약한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그간 일부 보조해 왔던 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결국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물론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재정자립이 되어 있는 외국의 예도 한국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이런 예산들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법률로 사실상 개입해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합비를 급여의 2%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재정자립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정이 취약하므로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노조간부 교육, 노동단체 정책개발 지원, 근로자 상담·연수, 국제교류활동 지원예산이 4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정 면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경제교육·노동외교 등 이런 것들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19억 7800만 원은 당초 노동부 요구안대로 3억 200만 원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지원비로 총 334억 원의 국고보조가 확정된 가운데 내년 예산으로 57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이 사업 첫해이고 건설경기가 유동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10억 원 정도는 더 증액된 67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건축비인데요. 우선은 나라형편대로 10억 원을 더 들여서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 걸려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10억 설계비를 마련하는 데 위원님께서도 예를 많이 쓰셨지만 진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내년은 금년에 반영된 57억 원 가지고 하고 그 후년 예산을 만들 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계획 연도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장관님 계획 연도가 2002년에서 2004년까지니까 3년간입니다. 2002년 예산을 57억 하면 334억 원 중 277억 원이 남는데 그것을 50% 갈라서 써도 연간 138억 원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업 첫해에 적어도 67억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앞서 全在姬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장관님께서 한국노동문화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과거에 지원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곤란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아직 그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을 한번 관계자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그 후에 지원액수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樂冀 委員** 이 협회가 1982년 당시 노동문화제 수상자 12명이 만든 단체인데 이미 아시겠습니

다마는 97년에는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서 매년 근로자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중·일 노동자미술전을 개최했고 노동문화 국제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한·중·일·대만의 미술교류전의 국내 개최 등 국제교류사업 수행이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일정 규모의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장관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중·일·대만 미술교류전의 국내 개최 등 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구체적인 규모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金樂冀 委員** 금년에 1500만 원 되었어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예.

○**金樂冀 委員** 금년에도 국제교류가 있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중국에서 했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것을 본부의 어느 국에서 주관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金在英** 근로여성정책국입니다.

○**金樂冀 委員** 그러면 근로여성정책국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노동부가 어느 정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면 되겠는지……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洸** 근로여성정책국장 신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일부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현재 별도의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마는 근로자문화예술제사업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겠지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 申洺**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알겠습니다.

신노사문화와 관련되어서 문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정간담회를 위해 2억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사정위원회의 전국순회 간담회와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동안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신노사문화운동을 하면서 바람직한 몇 개 사업장의 사례를 제가 부임한 후에도 여러 개 봤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가 무분규 선언을 하고 회사가 최대한 근로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대근로자선언을 하고 이런 것은 한국의 노사 문제의 미래를 보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전국적인 행사를 여러 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를 통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전 국민에게 노사화합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장에서 분규를 해결해 나가는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 예산을 지원 못 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전국순회 간담회와, 여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와 계십니까? 안 나오셨어요?

○**委員長 李允洙** 아까 노사정위원회에서 누가……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운영국장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왜 운영국장이 나와 있어요?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상임위원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아까부터 안 보였는데 잠깐이라고 그러면 돼요. 위원장은 못 나오더라도 책임자는 나와야지요.

○**金樂冀 委員** 노사정위원회 국장이 와 앉아 있으면,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가 아니라 노동부 산하기관입니까? 예산은 노동부 예산으로 편성되어도 특별히 책임질 사람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노사정위원회 전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와 있기가 어려워서 비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알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오신 국장께서 전국순회 간담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河甲來입니다.

순회 간담회는 주로 지역 노사정협의회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과 관련해서 5개 시도를 돌면서 공익위원안을 설명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하는 간담회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물론 업무성격이 다릅니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하는 전국순회 간담회는 노사정 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설득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집행기구가 아니지요?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그렇습니다.

○**金樂冀 委員** 집행기구가 아닌데 전국을 다니면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저희들이 주로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예를 들어 전면에 공익위원안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사, 공익단체, 학계를 모아서 그 공익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는……

○**金樂冀 委員** 노사정위원회가 안 해도 충분히 자기 조직의 홍보가 되는데 노사정위원회가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네요. 공익위원안 나왔으면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계는 노동계, 정부는 정부, 사용자는 사용자 단체에서 자기 조직의 주장을 하면 다 알고 있게 되는데 노사정위원회가 특별히 공익위원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노동부도 지역 노사정간담회라는 것이 각목명세서 147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46개 관서에 최우수기관은 10%, 우수기관은 30% 이렇게 해서 연 4

회씩 돈을 지급하는데 신노사문화 추진을 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46개 산하기관으로 보면 지역에 한 사오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노사분규가 있는 사무소에서는 계몽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노사 간의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수시로 연간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분규가 많거나 우수한 데는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좀 부진한 데는 축소하고 이런 형편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47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연구개발비가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본부 예산에 정책개발비가 10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연구개발비라고 한 것은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구체적인 설명은 국장으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정국장 安鍾根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신노사문화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노동부 전체의 연구개발비와는 별도로 편성한 것인데 주로 내용은 참여적 작업장 혁신 실태조사……

○**金樂冀 委員**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별도로 계상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노동부 본부 예산의 정책개발비와 같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런데 이것은 신노사문화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기초 정책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별도로 신노사문화사업 쪽에 편성한 것입니다.

○**金樂冀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을 깎겠다는 의미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소위원회 때와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211쪽에 노사정 간 신뢰성과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 활동비라는 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노사정위원회 예산입니까, 노동부 예산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노사정위원회 예산 아닙니까?

○**金樂冀 委員** 노사정 간 신뢰성과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 활동비라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돈은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떻게 해서 1억 3000만 원을 쓰는 것인지……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운영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간 신뢰성과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 활동비는 주로 사용처가 외국 노사관계 인사 초청토론회를 한다거나 지역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등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노사 관련 인사를 위문 격려한다거나 노사 관련 단체·학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金樂冀 委員** 그런데 이것은 노동부의 역할이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까? 노동부 노사정간담회 같은 것이 다 그런 것과 똑같은 역할인데 이상한 말을 붙여 가지고 남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노사정위원회가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되었지 이렇게 유도 활동비가 뭐예요. 이상하게 써 놓으니까 액수는 적지만 의혹이 가고 문제의 예산으로 본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勞使政委員會運營局長 河甲來** 알겠습니다.

○**金樂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金樂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鄭宇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宇澤 委員** 장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활직업훈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자활직업훈련 예산 배정액이 558억 원이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鄭宇澤 委員** 올해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실적이 얼마입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능력개발심의관 朴鎔雄입니다.

8억 3000만원입니다.

○**鄭宇澤 委員** 한 1.5%밖에 안 되지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집행실적이 저조하자 사업계획을 변경했지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 변경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변경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처음 계획은 3만 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계획하고 워낙 차이가 나 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변경 안 할 수가 없

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것은 원칙적인 것으로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취업대상자 확보가 불가능했지요?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리고 노동부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미흡했다고 판단하시지요?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래서 훈련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서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로 변경하였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한 변경이 아닙니까?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그런데 당초 설계했던 대로 하면 연말까지 가도 3만 명은 불구하고 2, 3%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대상자 자체를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결론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요건을 바꾼 것이지요?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결과적으로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더군다나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것을 증액하고 자활수당 신설 등으로 수당을 140%나 인상했어요. 그리고 고액과정에 대해, 전액을 지급하는 등 돈으로 유인하는 이런 것이 예산 낭비를 갖고 온다고 판단은 안 하십니까?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산이 낭비되었다기보다는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鄭宇澤 委員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유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그런데 실제로 수당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계획변경 후에 현재까지 예산집행 및 사업진도가 아직도 저조하지요? 얼마나 됩니까?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6월 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3000만 원 정도였는데 9월 말까지는 19억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鄭宇澤 委員 저는 약 20억 8000만 원, 3.7% 집행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 그정도 됩니다.

○鄭宇澤 委員 올해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약 3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鄭宇澤 委員 제 자료에는 382억으로 되어 있는

데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서 10월에 80억 원 전용했지요?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 8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전용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내년도 예산이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1만 9000명, 약 2만 명 정도가 직업적응훈련이라든지 직업훈련을 받게 되어 있지요?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 전체가 2만 명인데 실제 직업훈련은 5000명이고 나머지는 직업적응훈련입니다.

○鄭宇澤 委員 2만 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당초 연초에 사업할 때 계획했던 계획치에 오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러니까 취업대상자 1만 5000명 모두한테 직업적응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노동부의 2001년 종합취업지원계획안을 보면 조건부수급자 중 실제 사업대상은 1만 2533명이고 취업지원계획수립 곤란자 3002명이 제외될 경우에 9521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계획수립자 7648명 중에서 보면 직업훈련은 불과 6.4%인 49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을 감안할 때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직업훈련대상을 1만 명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직업훈련에 절반을 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서 90억 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働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그런데 실제 직업훈련대상자는 5000명입니다. 직업적응훈련 1만 5000명은 사실상 직업훈련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 사람들은 취업대상자입니다. 대개 자활대상자들은 취업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취업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취업하는 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하기 전에 직업적응훈련부터 받고 그 중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3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5000명입니다.

○鄭宇澤 委員 전원을 하겠다는데 제 생각에는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규모의 훈련대상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노동부의 자활지원사업계획이 잘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제안해 놓겠습니다.

자활구직세일즈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 盧民基입니다.

○**鄭宇澤 委員**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금년에는 자활인턴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인턴제는 말 그대로 특정 민간사업장에 그 사람을 매치시켜 주는 것인데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민간사업장에서도 자활인턴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자활인턴사업이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사람을 매치시켜 주는 자활인턴제사업보다는 저희 고용안정센터 같은 기관에서 그 사람들에게 구직세일즈라는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鄭宇澤 委員** 자활인턴제사업의 성과가 저조했다고 얘기하셨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鄭宇澤 委員** 300억 원 예산 중에 250억 원은 청소년인턴사업비로 전용하고 9월 현재 300억 중에서 겨우 5억 60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자활인턴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첫째로는 대상자 확보가 원천적으로 적었고 두 번째로는 자활대상자들을 기업이 쓰는 것을 기피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일할 욕구가 적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잘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자활대상자의 취업능력 부족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유인효과가 큰 자활인턴제사업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보다 유인효과가 작은 자활구직세일즈사업 역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용하거나 불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아까 자활인턴제가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직세일즈로 사업을 전환했을 때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자활대상자를 쓰는 쪽의 애로요인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활인턴제보다는 자활구직세일즈가 활성화시키기에는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사업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2000명씩 총 8000명을 계획하고 있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올해 자활사업의 실적을 볼 때 과다편성된 예산내역이 아닌가, 절반 정도 삭감한다고 하면 이견이 있으십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구직세일즈라는 사업이 고용안정센터에서 본인이 열심히 사업장을 다니면서 자기의 일자리를 찾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마저 자활대상자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자활사업으로서의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구직세일즈사업만은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의욕은 좋은데 내년 이맘 때 불용이라든지 이월하고 또 실패원인이 무엇이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인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인턴제 예산이 460억 원이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당초에 그랬습니다.

○**鄭宇澤 委員** 금년 3월에 전용한 예산이 있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鄭宇澤 委員** 얼마입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아까 말씀드린 250억입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추경에 또 250억을 했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러면 결국 당초예산 460억과 추경까지 해서 960억이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짚던 예산액보다 2배가 넘고 있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러면 예산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더군다나 사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250억을 전용했다는 것

은 노동부의 예산편성이 무원칙하고 방만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생각보다 연초에 청소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운 실업대책을 시행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보완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인턴사업……

○**鄭宇澤 委員** 하여튼 좀 문제가 있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鄭宇澤 委員** 사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250억을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다음에 예산집행실적이 9월 말 현재 4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85억 원의 이월이 예상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자금집행이 그렇다는 것인데 사업물량은 다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턴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집행의 성격상 끝나고 나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은 집행되었는데 자금이 이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鄭宇澤 委員**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노동부가 금년 예산을 460억 원 편성했으나 500억 원을 증액해서 현재 총 9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중 약 200억 원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금액으로 보았을 때 내년도 예산 500억 원 편성된 것에 이월되는 200억 원을 넣으면 약 700억 원이 되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그런데 청소년실업률 추이를 보았을 때 내년도 예산 중 이월액 만큼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률 추이는 수치는 갖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아까 200억 부분은 금년에 인턴으로 다 채용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턴을 마무리해야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돈 집행하는 것만 내년이 이월되는 것이지 지출원인행위는 금년에 다 이루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상 금년에 집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5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 실업 문제는

전체 실업률이 하향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인턴제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申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냐, 혹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鄭宇澤 委員** 노동부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부 단기대책으로 가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대외적으로 미국의 테러사건 여파도 있지만 근본원인이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국민이나 기업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청소년 실업 문제도 마찰적 실업보다는 구조적 실업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 실업대책보다는 직업훈련이라든지 학교 교육기회의 확대, 노동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등 장기적인 고용안정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취업유망분야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능력개발심의관 박鎔雄입니다.

○**鄭宇澤 委員** 이 사업이 98년에 예비비로 시작했지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그것이 훈련의 특성상 회계연도와 훈련기간이 맞으면 이월이 전혀 없는데 훈련을 2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월액이 98년에 52억 원, 99년에 79억 원, 2000년에 3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예산집행실적도 당초 예산의 55%, 추경예산 포함하면 24.5%밖에 안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이 전부 이월될 것으로 봅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추경예산이 15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11월, 12월에 일부가 집행됩니다. 추정하기로 올해 20% 내지 30%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鄭宇澤 委員** 1차 추경 심의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150억은 추경예산보다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본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대개 대학 4학년 2학기부터 구직을 하는데 그때 구직을 못한 사람은 10월, 11월, 12월부터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鄭宇澤 委員** 내년도 예산액이 300억 원, 이월예산까지 하면 450억 원인데 이것이 내년에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대개 훈련이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서둘러서 할 예정입니다.

○**鄭宇澤 委員** 제가 볼 때는 3월부터도 아니고 하반기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대개 훈련이 3월 내지 4월에 시작합니다. 훈련기간이 대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3, 4월에 시작하면 9, 10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누적되어서 숫자가 많습니다.

○**鄭宇澤 委員**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려고 하는데 훈련대상자가 대부분 대졸 미취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鎔雄**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보니까 훈련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니까 상반기에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사협력지원사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정국장 安鍾根입니다.

○**鄭宇澤 委員** 노사협력지원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2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약 10.4% 증가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예.

○**鄭宇澤 委員** 그런데 증액내용이 주로 노조간부 교육 인건비, 지역별 근로자상담연수 인건비, 노동단체 정책개발지원 인건비 이런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 委員** 정부에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등을 꼭 지원해야 합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사실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노동단체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고 사실 이 지원은 76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축소할 경우에 그동안 수행해 온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鄭宇澤 委員** 노사협력지원비는 정부가 하기 어려운 노사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노사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자체 수입을 확보해서 수행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증액분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보아 가면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鄭宇澤 委員** 하지만 매년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노동조합에 지침을 주고 미리 정부의 의지를 펴 나가는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알겠습니다.

○**鄭宇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鄭宇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明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憲 委員** 질의할 것을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여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允洙** 감사합니다.

다음은 吳世勳 위원 순서입니다마는 바꾸어서 朴赫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赫圭 委員** 朴赫圭 위원입니다.

한국노동교육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에 주민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셨지요?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예.

○**朴赫圭 委員** 제가 초청받았는데 못 가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종종 하셔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노동교육원에서 강의동 증축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예, 그렇습니다.

○**朴赫圭 委員** 그런데 그것이 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급한 것은 아닌가 보지요?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저희들은 공사기간을 6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朴赫圭 委員** 그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느냐, 본부에서 생각할 때 올해 안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朴赫圭 委員** 보니까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것은 6개월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예, 그렇습니다.

○**朴赫圭 委員** 그래서 이 예산을 노동교육원에서 요청했는데 본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기획예산처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韓國勞動教育院長 李銑**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朴赫圭 委員** 어떠한 이유로 안 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는 금년도 재정규모가 있으니까 2개년으로 나누어서 짓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朴赫圭 委員** 금년에 골조만 세워놓고 내년에 하라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골조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금년에 하고 하나는 내년에 하라는 것입니다.

○**朴赫圭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6개월 동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수정안을 예결위원회에 보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예

산 같으니까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처에 보내면…… 제가 또 운영위원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노사문화창출지원사업, 청소년인턴제, 자활 직업훈련, 노사정위원회 특정업무비와 국외여비 예산의 타당성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朴赫圭 위원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가장 잘하고 계시는 한나라당의 吳世勳 위원님 시간지켜서 질의하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吳世勳 위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해서 각종 기금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에 극히 미미하고 그나마 절대 액수 자체도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全在姬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짜면서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부분을 높이기 위한 노동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30% 정도는 메워 나가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부처들도 일반회계에서 못 따내게 되면 결국 기금에서 충당하는 안이한 방법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일반회계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미 국회심의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당국이 동의 안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작업할 때는 한 30% 정도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올해는 노동부 차원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와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吳世勳 委員 기획예산처는 어떤 근거로 해서……

○勞働部長官 劉容泰 근거보다는 전체적인 재정을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금사업같은 부분은 다른 일반회계보다도 아주 인색하게 편성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종전의 태도였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吳世勳 委員 내년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엔 하시는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라는 데가 워낙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덜 나누어주기 위해서 논리를 세우는 곳이고 각 부처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설득해야 많은 예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해서 외국의 정부 부담분을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비용의 일부 및 관리운영비, 독일의 경우에는 실업부조비용 전액 및 실직자의 사보험 부담금,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관리운영비 및 적자보전 그리고 연장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소득조사급여와 기타 부조비용, 프랑스의 경우에는 실업부조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한단 말이에요.

아까 비율에 대해서까지 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만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고 그나마 경상경비 정도도 턱없이 부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주 심각한 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 168개소 중에 32군데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2002년 예산에서는 43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인력은행 7군데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직업상담원 2057명 중에 315명 및 고용정보요원 36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결국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전혀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아주 우스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느냐, 그냥 노사의 상호부조제도라고 표현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

면 노사단체에서 고용보험의 운영권을 가지겠다고 주장해도 노동부 입장에서는 딱히 내놓을 만한 근거가 없는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근거를 마련해서서 내년엔 예산당국하고 협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기금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고용보험기금만 말씀드렸는데 계산해 보면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산재예방기금도 그렇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도 그렇고 임금채권보장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공단별로 따로 계산하면 더 수치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소위 활동 전까지 각 기금의 성질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려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시키는 것이 각 기금별로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30%를 말씀하셨는데 30%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첫 단계에서는 적어도 관련 경상운영비하고 전담요원 인건비 정도는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산해 보아 주시고 그 정도가 되려면 몇 %나 될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따로 자료를 준비하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실업특위 때에도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실업 문제 해결이 이제는 단기적이고 성과주의적인 것들을 떠나서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10년 뒤 정도를 바라보는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당장 경기가 안 좋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소모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방만하게 운영된다, 별 준비가 없었다 이런 지적을 받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채용관행 자체가 일정하게 학기 말이 되어서 대졸 취업생들이 나오면 그때 그 사람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는 방식이 이제는 점점 더 변화되어서 수시모집을 합니다. 그것도 당장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 경력이 있으면 더욱

좋고 경력이 없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경로를 밟았건 간에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면 기업체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채용해서 교육훈련시켜서 쓰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전문화된 직종의 인력이 요구되는 것이지 학과중심, 학식중심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배출해서는 취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부 자체만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테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미리 의논해서 작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청년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산학연계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올해까지 시행된 실업대책을 보면 맞춤형훈련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맞춤훈련이 올해 몇 명 정도 대상자가 있었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1만 7000명입니다.

○**吳世勳 委員**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완료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1만 300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吳世勳 委員**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전체 실업자직업훈련의 15%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내년도 계획을 알아보니까 20% 수준 정도로 올린다고 노동부에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요.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현재 맞춤형훈련의 대상자는 중고등학생들이 제외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졸업 직전의 고학년이 되면 맞춤형훈련 대상자로 들어가서 학교 다닐 때부터 기업체가 원하는, 기업체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교육이 되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직업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맞춤형훈련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턴제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도 이루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못한 편이고 또 정규직 전환효과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고급인력을 비정규직화시켜버리는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학이 연계되어서 맞춤형훈련을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그런 형태로 써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천안 국가기술자격상설검정장 건립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대전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데 대전검정장의 경우에는 2000년 건립 이후 현재까지 활용도가 타 지역 검정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면 굳이…… 강원도는 좋지만 천안지역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부산인력개발타운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대한 선심성사업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李允洙 위원장, 申溪輪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노동뉴스를 발간하는 데에 예산이 8억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홍보지 역할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관점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아까 지적이 있으셨습시다마는 신노사문화 창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과 똑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다음은 金文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도 관심이 높으시겠지만 특히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바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여전히 노동계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5일제 근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데 대한 현장의 실태조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노동연구원의 김승택, 박우성, 안주엽, 전병유, 정진호 연구위원들에 의해서 연구

된 13쪽 짜리 문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 노동부에서 용역 준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金文洙 委員** 그때 얼마 주었습니까? 그냥 공짜로 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노동연구원에 연간 저희 노동부가 지원하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또 노동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제목을 선정해서 연구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안 하고 노동연구원 자체 사업으로 해서 연구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때 주5일제를 하면 일자리 약 68만 개가 추가로 생긴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해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매크로한 추세 연구 또는 일정한 추론 이런 수준이에요. 실태조사에 입각한 조사가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델에 의해서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가정 등에 있어서 실증적 유효성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현장에서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현장실태조사를 체험적으로 해 보면 대체로 주5일제 근무는 제조현장 특히 중소제조업, 또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3D업종 이런 곳에 상당한 정도의 코스트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트 상승이 제조업체를 해외로 이전케 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폐업케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체로서 상당한 부분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한계기업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실업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아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지금 노동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5일제 근무가 실제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처럼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몇 년 뒤에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노동연구원의 자료 말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예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연구자들이 어떤 모델에 의해서

그냥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실태조사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현장실태조사는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고…… 물론 연내에 도입을 완료해 버리겠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무조건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노동연구원에서는 6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고 재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서로 팽팽한 대치와 자기 주장의 강조·반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논의를 보다 현실적이고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종합 분석해서 예측할 때라야만 정말 노동자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주5일제를 하자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의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다면 진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함으로써 오히려 노동복지의 후퇴를 가져올 것인지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잘 분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쪽이다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케이스를 현장에 다니면서 죽짚어보니까 적어도 제조업체 중에서 경쟁력이 약한 영세중소제조업체, 노동집약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코스트 상승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또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밀어붙일 때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선진국으로의 도약,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수준으로 올리는 데까지 아직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 예산을 일정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이 제도는 정부 스스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전제하에서 심도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

임위원회에 소속해 있을 때 8월15일, 늦어도 8월 말일까지는 정부에 넘겨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가자마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 차례의 회담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또 이 시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그와 같은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확한 조사가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물론 정부의 홍보도 부족했지만 합의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해 놓고 현장 실태조사라든지 효과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반대하는 측에서 이 실태조사에 정확하게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실태조사가 애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해서, 또 외국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시작한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시에 전 사업장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수년 후에 해당 사업장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3D 업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실시하는 단계적 시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시지 마시고 좀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도 만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이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유도해 가지고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약 2개월 동안 끌어왔었는데 향후 가급적이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작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노사정 간 합의는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안 할 것이냐 또 합의가 되면 저는 여야 간이나 노사 간에 누구라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도입하는 데가 있겠느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먹구구로 또는 어떤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으로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산업구조에 대한 상당한 변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사회·문화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만큼 모든 학문적인 지적인 또는 산업현장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지 실태조사해서 한테가 있느냐 고로 우리도 실태조사 안 하겠다라든지 이것은 저는 조금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일자리 68만 개 생긴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제가 작성한 연구자들한테도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것이 객관성이 있으면 이것 믿고 다하지 68만 명 일자리 생기는데 왜 안 합니까?

제가 앞장서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지금 같은 때에 실업대책의 최우선적인 한 과제로 이것을 집행하지요. 국민들 다 박수치지요. 그러나 다르다 이것이지요. 학문적으로 보면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분석이지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이라고 보느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더 조사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더 계상할 필요도 없고……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로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溪輪 간사, 李允洙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더 책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기존 예산 가지고 될 것입니다. 다른 연구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활용을 하면 별도로 예산을 마련 안 해도 그 예산 가지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文洙 委員**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조

선업에는 각 규모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또 섬유에는 어떻다 이런, 각 산업별·규모별·지역별로 이 제도를 실시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할수록 이 정책은 훨씬 더 합리성을 얻고 그 뒤의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소의 코스다, 조사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가장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정책 자체가 소프트 랜딩하는 데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는 강력하게 이것을 추천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실업 문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낸 여러 가지 문건을 제가 많이 보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노동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경제부처하고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물론 경제대책회의에서도 보고되었다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봅니다마는 종이 한 장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청년실업대책을 보면 실제로 내년 예산규모는 500억 원인데 청소년 인턴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11월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별도 예산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교육부나 다른 경제부처하고 장관님이 직접 협의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이냐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것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노동관서로서 가지고 있는 숙원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인가를 할 때 적어도 장기적인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인가 내지는 숫자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연계되어야 되겠고 또 기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몇 번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여러 해 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그와 같은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해도 교육인적자원부도 발족한 지가 시일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金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와 같은 정도의 업무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역시 수요와 공급이 정책에 적용되도록 인적자원 조사가 병행이 되어야 저희들도 사실은 원만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추세, 재작년에 있었던 대체적인 집행실적이나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이 점은 나온 것을 보니까 어떻게 써 왔느냐 하면 금년 11월 중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내년 1, 2월쯤 집중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추후 사업시행 성과를 감안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봐서 좀 약합니다.

그래도 실업대책 총괄은 노동부 아닙니까? 그 점은 여전하지요? 실업대책기구가 느슨해지고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겠지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또는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나온 중·장년층 등 특정한 층의 장기실업도 아주 구조적인, 일시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인 실업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께서 주도를 해 가지고 각 부처 장관들도 같이 모여서 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청년들의 실업이 아주 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정하게 대학원 정원을 늘려준다는지 다른 어떤 방식을, 여기에는 보니까 실무수습 및 직장경력을 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야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도움이 되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유효하고 유용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반드시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연수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대학원 정원을 늘린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부처와도 마찬가지로 해서 장관님도 직접 현장에도 나서시고 부처간의 협의도 하시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연구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하고 각 대학에 있는 사람들 또 졸업생들, 취업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지 종이 한 장을 믿기에는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고 노동부가 너무 안이하다, 그 심각성에 비추어서 너무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금이라도 추가로, 유효한 방법이 있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사회적인 문제와 걱정요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고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래서 유인물 5쪽에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해서 몇 줄 써넣기는 했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정부 내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처 회의 또는 협조를 받고 또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 계획을 더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文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吳世勳 委員** 위원장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金文洙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국감 때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부 마무리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실업대책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주5일 근무제의 효과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분석·예측기구는 안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만들었습니다.

○**吳世勳 委員**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이제 1차 회의, 2차 회의를 했으니까 회의가 거듭 되면서 좀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그러면 그 기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 또 예측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 기구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해당 각 부처가 맡아서 하게 되겠지요.

○**吳世勳 委員** 지금 어느 부처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그런데 왜 아까 답변하실 때 실태 조사를 외국에서 한 사례도 없고……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런데 실제로 시행한 나라들의 흔적을 보니까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 기록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吳世勳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구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 기구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기획단입니다.

○**吳世勳 委員** 그러면 구성은……

○**勞動部長官 劉容泰** 총리실이 주관을 해 가지고 각 부처가 다……

○**吳世勳 委員** 각 부처에서 어떤 분들이, 노동부에서는 누가 참여하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노동부에서는 장관이 직접 참여하고, 우선 각 부처 장관들로 운영을 하고 또 실무자회의도 만들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운영을……

○**吳世勳 委員**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단 각 부처 장관들끼리 1차 회동을 했다 이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1차 회동을 하고 차관들도 1차 회동을 하고 조금 있으면 아마 국장들 간에 다시……

○**吳世勳 委員** 그러면 국장들 간에 만들어진 기구가 실무기구가 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그렇게 될 것입니다.

○**吳世勳 委員** 그 실무기구를 통해서 노동부장관께서는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시행을 하게 되면 법도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에 따른 효과도 측정해야 될 것이고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같은 것도 사전에 도출을 해서 보완책도 토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각 부처의 기능이 다르니까 자기들 부 나름대로 또 특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吳世勳 委員** 그것이 활동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기한을 가지고 활동하실 생각이십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일단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도 역시 효과측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계속 그 후까지도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吳世勳 委員**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시행 이전에, 100% 완벽한 예측이야 힘들겠습니까마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것처럼 전 산업부문에

결친 여러 가지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를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 대한 완벽한 예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야 노사정 합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일단 시행은 시행대로 하고 시행 후에도 계속해서 기구가 굴러가면서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간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왜냐하면 시행을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대원칙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1차 시작을 하고 500인, 300인, 100인 중소기업으로 해를 거듭 하면서 확대해 나갈 때 만약에 시행을 내년 1월부터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5년, 6년, 7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해 가지고 그 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吳世勳 委員**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도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吳世勳 委員** 지금 말씀을 들으면 제가 처음에 여러 번 축구를 했던 그 내용과는 성격이 다른 기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언뜻 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몇 인 이상 사업장부터라고 거칠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단계적 시행도 결정을 하고 시기도 결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적인 시범사업도 해 보고 이런 취지에서 완벽한 준비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달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받는 느낌은 반드시 그런 성격의 모임은 아니지 않겠는가 싶은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기구가 활동해야 할 범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가 나름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노동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스스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어 내고 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기능별로 시행계획을 만들되 중앙에서 각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吳世勳 委員** 노동부에서는 실무 국장님이 누구시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근로기준국장입니다.

○**吳世勳 委員**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상·성격상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과 추후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근로기준국장 白日天입니다.

지금 준비 상황은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개……

○**吳世勳 委員** 저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그 기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정리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맨손 쥐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장관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주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일반 중소기업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처가 참여해서 각 부처별로……

○**吳世勳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동부의 입장에서 그 기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총리실이 주관이 되는 모양인데 실무 전담부서는 노동부가 되어야 될 성질의 기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이것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민간기업은 저희 노동부가 하게 되고 공무원, 학교 등 공공부문은 행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하게 됩니다. 노동부가 타 부처까지 총괄적인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吳世勳 委員** 실무국장님으로서 노동부의 입장에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 기구에 임하는지, 노동부는 이 기구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어내고자 하는지 그리고 타임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러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그렇습니다.

○**吳世勳 委員** 거기에 대해 준비된 계획서가 없어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앞으로 단계별 시행 계획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언제부터 어느 부분이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吳世勳 委員** 아니, 시행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아니고 이 기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성과물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크게 각 레벨별로 구성하고, 아직은 이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다. 일단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吳世勳 委員** 관계국장님들 회의는 언제 할 생각입니까?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현재 총리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수준이나 시기를 보아 가면서……

○**吳世勳 委員** 뭐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날짜가 안 정해져 있으면 12월에 할 것이라든지 내년 1월에 할 것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하여튼 이것은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질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무엇하려고 합니까?

○**勞働部長官 劉容泰** 노사정 합의는 대원칙만 결정하는 것이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각 부처별로 결정할 것입니다.

○**吳世勳 委員**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갑자기 합의하면 그대로 하나요? 년센스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부터 의문이네.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일단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世勳 委員** 각 부처별로 준비는 해야 되는데

노동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것이 없어요? 구상이 없어요? 이 기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해 달라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그것을 알 자격이 없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해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吳世勳 委員** 구체적으로 보고할 내용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큰 그림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저는 그런 답변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웬만큼 해 두고 사후에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勞働部長官 劉容泰**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회관으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吳世勳 委員**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안개에 싸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자꾸 확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데 주무 국장이 그정도밖에 답변을 못해요? 당장 계획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면 사후에 가지고 와서 알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러려면 국회가 무엇하려고 있습니까?

○**勞働部長官 劉容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오히려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된 석상에서 국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吳世勳 委員**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상에 대해서 이번 주일내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시지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알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하셨습니다.

○崔明憲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允洙 예, 말씀하시지요.

○崔明憲 委員 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예산 소위의 위원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여기에 안 나오셨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해외출장 갔습니다.

○崔明憲 委員 제가 알기로는 기능올림픽 끝나고 선수들 위로차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산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지, 기관장의 생각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보는데 산업인력공단은 내년도 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것이지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회에 임하면 곤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允洙 알겠습니다.

金晟祚 위원.

○金晟祚 委員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확충필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서울대 등 큰 대학병원 이런 곳에서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金晟祚 委員 그 이유는 산재보험 적용자가 병원에 있는 날이 평균 39.7일입니다. 이에 비해서 건강보험 대상자는 10.5일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산재 지정해지신청서를 제출해 놓았고 비지정 종합전문요양병원을 보면 서울대학병원, 가톨릭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원자력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산재전문요양병원으로 지정받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8월19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익률 보전을 위하여 진료행위가산율 12.5% 인상 등 병원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들 병원이 산재병원으로 지정되고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金晟祚 委員 그리고 비교적 사회주의정책을 쓰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2.1%, 프랑스는 69%

가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색채가 강한 미국도 34.6%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32.8%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만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높을 필요가 있다고 선진국에서는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13.3%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이 재정 면에서 그렇게 적자일 변도로 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털하면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의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에 근로자 1000만 명에 3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360만 근로자에 1개, 광주·전남에 15만 9000명의 근로자에 1개, 대전·충남에 16만 명의 근로자에 1개가 있고 특별히 강원도는 진폐증 환자가 많아서 근로자 수는 비록 6만 9000명밖에 안 되지만 3개의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5만 6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지역에 산재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대한 병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勞動部長官 劉容泰 강원도에 병원이 3개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라는 과거 산재환자가 탄광지역에서 다발했고 특히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 태백 지역과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병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60만의 근로자가 있는 지역에 산재병원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향후 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혹시 그 검토를 하면서 민간부문의 병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물론 조금 고려는 해야 되지만 산재병원을 건립하지 않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도 사립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공립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劉容泰 예, 알겠습니다.

○金晟祚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允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노동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9일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는 金樂冀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金晟祚 위원, 全在姬 위원, 李浩雄 위원, 朴洋洙 위원, 崔明憲 위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과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出席委員(14人)

金 樂 冀	金 武 星	金 文 洙	金 晟 祚
朴 洋 洙	朴 仁 相	朴 赫 圭	申 溪 輪
吳 世 勳	李 承 哲	李 允 洙	全 在 姬
鄭 宇 澤	崔 明 憲		

○請暇委員(1人)

金 元 吉

○出張委員(1人)

李 浩 雄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姜 長 錫
전 문 위 원	朴 龍 判

○政府側參席者

노동부

장	관	劉 容 泰
차	관	金 松 子
기 획 관 리 실 장		金 元 培
고 용 정 책 실 장		金 容 達

노 정 국 장	安 鍾 根
근 로 기 준 국 장	白 日 天
산 업 안 전 국 장	宋 智 泰
근로여성정책국장	申 洛
고용총괄심의관	盧 民 基
능력개발심의관	朴 鎔 雄
노 사 협 력 관	鄭 鍾 秀
국 제 협 력 관	孔 德 壽
중 앙 노 동 위 원 장	林 鍾 律

○其他參席者

근 로 복 지 공 단 장	金 在 英
이 사 장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文 亨 男
한 국 장 애 인 고 용 촉 진 공 단 이 사 장	孫 京 鎬
한 국 노 동 교 육 원 장	李 銑
노 사 정 위 원 회 장	河 甲 來
운 영 국 장	